

제209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 답변

“ 제 기능을 못하는 「돈 먹는 하마」 자원순환단지
소통없이 이대로 추진되어야 하는가... ”



한 근 수 의원
(새누리당 유성구 제4선거구)



*한근수 의원

「시정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시장·교육감과의 일괄질문·답변방식으로 편집하였습니다.



◎ 한근수 의원

새누리당 소속 유성구 제4선거구 한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광영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전시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늘 수고하시는 염홍철 시장님,
대전교육 발전에 온 힘을 쏟아주시는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공무에 열심이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자원순환단지 조성사업에서 그동안 지적
되었던 문제들에 대해 보다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부터 음식물쓰레기, 음폐수 및 하수슬러지 등 유기성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시기가 도래하였기 때문에 육상 처리시설 설치가 시급하고 2016년 이후에는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유기성폐기물을 처리하여 에너지로 전환하는 자원 순환단지조성 사업이 중요한 당면 과제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급할수록 돌아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곱씹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대안을 적극 반영하여 성공적인 자원순환단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 주시리라 믿으며 염홍철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최근 폐기물처리의 패러다임 변화와 유기성 폐기물 해양투기 금지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금고동 매립장 부지에 2015년까지 RDF 즉 폐기물 고형연료화시설, RDF 전용보일러,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그리고 음폐수 에너지화 시설을 포함하는 자원순환단지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자원순환단지 조성사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 2,079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생활폐기물을 포함하여 1일 처리용량이 900여 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순환단지 내에 들어서는 시설들에 대한 경제성 및 환경성 등에 대한 부정적 요인과 사업추진방식 그리고 일방통행식 사업진행으로 인한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상당수 지적되고 있어 이 자리를 빌려 함께 고민해 보고 올바른 해결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사업내용은 도심 생활폐기물을 RDF로 고형연료화하여 전용보일러 시설의 연료로 사용, 여기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하수슬러지를 건조한 후 화력발전소의 보조연료로 납품한다는 것이 주요골자로 일견 폐기물을 에너지로 활용하는 완벽한 자원순환의 시나리오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기술적 결함과 운영비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어,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우리 시가 져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98회 정례회 환경녹지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이미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타지자체를 방문하여 자료수집을 통한 현황분석 후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자원순환단지의 시설별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업성공의 열쇠인 정확한 통계자료로 본 사업이 설계되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RDF 제조시설이 비성형 고품제품 기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함수율, 발열량 등 발생폐기물에 대한 정확한 성상 예측과 생산된 RDF의 수량과 품질에 관한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운영현황 보고서에 제시된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평균함수율과 저위발열량이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내용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사업의 전제부터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만약 민간제안 내용대로 RDF제조시설이 설계된다면, 이 사업은 시작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함수율이 높은 폐기물이 반입되면 분리·선별 공정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건조공정의 과부하로 인해 당초 설계보다 실제 RDF 생산율이 낮아지게 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조공정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전력비와 연료비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는 시행착오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워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는지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시행 초기 환경부에서 선정한 4개 시범사업 중 사업 자체를 포기한 강릉을 제외한 수도권 매립지, 이것은 서울을 말합니다.

부천 및 부안 등 3개의 시범사업 중 제대로 운영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으며, 시행착오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시범사업에서 높은 함수율, 그로 인한 흡착현상이 발생하였고, 선별불량으로 인한 가연물의 함수율이 증대되고 건조기에 과부하가 걸려 처리효율이 저하되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봉책으로 건조기를 추가 설치하거나 외부연료 투입량을 높임으로써 생산비가 상승되었고 이는 과중한 운영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어 지방재정을 더욱 더 열악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LNG 경유 등 지나친 화석연료 사용이 자원순환의 취지에 부합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에너지 활용 측면에서 우리 시의 경우 발열량이 4,154kcal의 RDF를 생산하겠거나 건조과정에서 약 800kcal 이상의 에너지가 필요하며 32.25%의 높은 평균 함수율을 고려하면 이에 따른 에너지 투입량의 증가는 처리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져 환경성 및 경제성이 악화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경유 및 LNG 등 화석연료 사용량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할 때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며 이는 본 사업의 취지인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부합되지 않아 대안 제시를 주문하였습니다.

셋째, 건조하수슬러지가 보조연료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가의 의문입니다.

우리 시 대전하수처리장에서는 소화조를 통해 유기물을 감량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수슬러지의 자체 열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성 부족으로 보조연료로 사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건조하수슬러지의 법적 연료기준은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를 지적하였습니다.

넷째, 왜 재정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는가입니다.

그동안의 재정사업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사업추진방식 변경과정에서 사업규모 조정이 얼마나 원칙과 기준 없이 진행되었는지를 지적하였습니다.

2009년 당시 집행기관은 의회와 협의하여 예산까지 심의한 자원순환단지 사업을 의회와 협의도 없이 갑자기 BTO 방식을 채택하여 민간사업자에 대한 견제장치도 없는 구조적인 한계에 봉착할 우려가 커졌습니다.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업의 민자추진은 타지자체의 사례에서 봐 왔듯이 곧바로 사업실패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본 의원은 사업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

사업으로의 전환을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해 왔고, 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반드시 민자로 추진해야만 한다면 여러 업체가 경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부고시 민자방법”이 그래도 용인될 수 있는 방법임을 제안했었습니다.

다섯 째,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소통 및 사회적 합의가 있었느냐입니다.

자원순환단지 조성사업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직까지 불안정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음에도 시의회 설명 및 충분한 소통과 사회적 합의과정이 생략된 채 시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업방식과 공사비, 운영비 및 처리용량 등 사업내용이 수차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주민설명회 및 기술관련 토론회 한번 개최하지 않은 것이 현재 대전 시의 모습입니다.

사업초기부터 타지자체에서 발생한 기술적인 오류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의회 차원에서 끊임없이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책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문제제기에 대한 일체의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적합한 기술검토와 사업 추진방식 등 대책수립에 대한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그동안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고, 모든 처리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겠다”라는 원론적인 말로 의회와 시민을 안심시킨 후에 뒤로는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있게끔 우리 시의 입장과 견해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자원순환단지 사업의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본 의원은 위에서 지적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우리 시가 제3자 공고를 추진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몇 가지 검토해줄 것을 대안제시 겸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자원순환단지가 들어서는 금고동 매립지는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예상 부지와 짧게는 400여 미터 내에 위치하고 있어 환경의 세밀한 분석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다면 자칫 우리 시의 숙원사업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기술적 결함과 운영비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자원순환단지는 두고두고 애물단지가 될 것이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우리 시가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업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재정사업으로 사업방식 전환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에서 주도하는 재정사업으로 본 사업이 추진되면 기술적 결함을 우리 시의 큰 인프라인 대덕연구개발특구 및 지역 대학의 최첨단 환경기술의 도입으로 극복할 수 있고, 연구개발 용역 등을 통해 처리기술의 한계를 넘을 수 있으며 시너지효과도 클 뿐더러, 연구개발을 통해 취득한 지적 소유권 등은 우리 시의 큰 자산이 되어 활용가치가 극대화될 것입니다.

굳이 민간기술을 활용해야 하겠다 이런 고집과 마음을 끝까지 갖는다면 현재 제3자 공고방식 이외에 민·관 공동출자를 통해 개발하는 ‘제3섹터 개발방식’의 도입도 민간사업자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해볼 만하다 생각합니다.

둘째, RDF 제조시설의 경우 대기오염 물질인 일산화탄소 배출허용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아 대기오염에 무방비 상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산화탄소는 연탄가스의 주성분으로 이를 많이 들이마시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오염환경보전법」상 RDF 제조시설은 일산화탄소 배출허용기준이 없어 통제할 기준이 없습니다.

원주시와 부천시에 설치된 RDF 제조시설에서 배출된 일산화탄소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 유사시설인 소각시설의 배출허용치보다 약 2.6에서 11배나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법적기준이 없어 단속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자칫 지역주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고 향후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대기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음식물쓰레기종량제 및 도안 신도시 클린넷 시스템 등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는 기존 대책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시설용량 등을 정확히 설계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넷째, 물리적 재활용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최소한의 화석에너지가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파쇄·건조·압축성형 공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째, 시범사업에서 부정확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시설을 설계함으로써 분리·선별공정의 차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생산율 저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전문가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참여로 적절한 기술, 설계 등 시설 전반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과정을 거쳐 타지자체에서 발생한 문제를 답습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섯째, 운영비의 증가는 지방재정의 악화를 초래하므로 공법 또는 업체 선정 시 운영비 항목평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의 경우 처리업체 선정을 위한 공법 평가를 허술하게 해 이미 시설 준공을 한 14개 지자체에서 애초 약속된 운영비보다 평균 2배에서 많게는 3배 넘게 더 들어 예산낭비가 벌어졌습니다.

운영비에 대한 정확한 검정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앞서 지적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들이 도출되고 사회적 합의와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관련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대전시의 변방이었지만 지금은 국가의 중심이 된 이 지역에 친환경적이고 고효율의 환경단지가 조성되지 않으면 가까운 장래에 이전을 고민해야 하는 큰 문제에 직면할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항상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시정을 펼치고 계시는 염홍철 시장님!

절차에만 얽매이지 말고 원점에서 초심으로 돌아가 과연 시민의 입장에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이 될 것인지 충분한

검토 후 금번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본 의원이 언급한 여섯 가지의 우선 검토 내용에 대한 대전시의 입장과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염홍철 시장

다음은 존경하는 한근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근수 의원님께서서는 자원순환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유기성폐기물의 해양배출금지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시급성에는 공감하나 급할수록 타시·도 문제점을 감안하고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성공적인 자원순환단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자원순환단지 조성을 민자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재정사업이나 제3섹터 방식으로 바꿀 의사는 없는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해주셨고 이것은 뭐 거의 3년 전, 2년 반 전 한근수 의원님께서 시장에게 질문한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때도 답변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저는 민자사업 또 재정사업, 제3섹터 각각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어느 하나가 우월한 장점만 가지고 있고 어느 방법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없고 각기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제가 취임을 2010년 7월에 했는데 민간제안을 접수하고 6월에 KDI에 제안서 타당성 검토의뢰가 끝난 뒤였습니다.

그래서 그전의 논의라면 저의 의견을 강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이미 KDI에 제안서가 접수된 상태고 피맥에서 여러 가지 경제성이라든지 민자적격성 등을 심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단하는 것은 대전시가 아니라 KDI 피맥의 검토결과에 의해서 그 사업이 취소되거나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보완과정을 거쳐서 금년 2월에 피맥으로부터 이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가 우리 시에 도착했습니다.

현재는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기획재정부에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 단계에서 이 사업을 변경하려고 하면 기획재정부에서 민간투자사업심의에서 결격이 있다고 판정하면 이 사업이 바뀔 수 있지만 우리 시의 의지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런 큰 사업들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절차 이행 중이니까 그 절차 이행에 권한을 가진 기관에서의 결정만이 유효한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시가 지금 현재 재정사업으로 이것을 전환한다든지 제3섹터 개발 방식을 도입한다든지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다.

그러나 아직도 이것이 최종사업으로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근수 의원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시겠습니다만 현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절차를 진행 중이고 그런데 이것은 공공성이 확보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3섹터 방식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국비지원과 민간투자사업이 연결되기 때문에 제3섹터 방식에 가까운 사업이다 해도 큰 과장은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환경 관련사업을 민간투자로 유도해서 현재 부산, 대구, 포항에서 자원순환단지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한 걸 보고 저희들이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 요청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결과를 봐야 되고 만일 심의가 통과되면 제3자 제안공고 등을 거쳐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서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부터는 사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과 함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주셨습니다.

첫째가 폐기물 고형연료화 RDF조, 제조시설 가동 시 일산화탄소의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법적기준이 없는데 대기오염 방지대책 수립에 대한 계획은 무엇이나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대기오염과 관련해서는 인근 주민 모두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사항으로 본 시설이 설치되는 금고동 매립장에도 현재 주민지원협의체가 운영 중이며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지난 2013년 1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따라 금강유역환경청과 아황산가스, 오존 등에 대한 환경영향저감 방안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대기로 배출되는 각종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등의 처리를 위한 집진설비를 최첨단시설로 설치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고,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상 단계에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세부적인 대기오염방지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음식물쓰레기종량제 및 도안 신도시 클린넷 시스템 등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는 기존 대책과의 조화를 고려한 RDF 폐기물 고형연료화 시설용량 산정에 대한 설계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 생활폐기물은 1일 1,519톤이 발생하고 이중 재활용이 978톤 약 65%입니다.

소각이 278톤, 매립이 263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쓰레기 종량제의 시행 이후 발생량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폐기물 고품연료화 즉 RDF 시설용량에 대해서는 KDI 피택에 의뢰하여 쓰레기 발생량 예측과 처리에 대한 효율성, BC분석 등에 대해 검토를 받았으며 또한 환경부 지침에 의거 설치된 환경부 최저가사업추진단으로부터 우리 시의 시설용량이 적정한지를 검토 받은 결과 시설용량 즉 400톤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자원순환단지 조성 시 경유 및 LNG 등 화석 에너지 사용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화석연료는 비상시 외에는 사용계획이 없으며 대부분 전용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열원을 자체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최소화 방안이 마련됐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원순환단지 조성 시 전문가를 포함한 이해 당사자의 폭넓은 참여로 기술 설계 등 시설 전반에 대한 논의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민간제안사업은 제3자 제안공모를 위한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3자 제안공고 후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화석에너지 사용 최소화 방안 및 공법 등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비의 증가는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함으로 운영비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될 수 있는 근거마련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본 민간제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적정한 비용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3자 제안공고 시 총사업비와 운영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평가 항목에 관련 항목의 배점 기준을 높였으며 제안사업은 BTO 즉, 건설이전운영 방식으로 15년간 운영 후에 우리 시가 운영하게 되며 일정수입 확보를 위한 최소 운영 수입보전은 없으므로 운영비 증가로 인한 재정악화는 없을 것입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실시협상 과정에서 정확한
검증을 통하여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존경하는 김종천 의원님과
한근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상당히 어렵고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렸는지 확실치 않
습니다만 지금 두 의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질문해 주시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는 보고말씀을
끝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근수 의원 《보충질문》

지금 답변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염홍철 시장님 세밀히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본 의원이 2010년도에 시정질문했을 때 답변내용과 거의 똑같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피맥에서 정리한 내용을 행정절차에 의해서 이것은 해야 되겠다.’ 이 내용 외에는 사실은 핵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기로는 먹는 것은 한 1주일 물만 먹어도 삽니다.

그런데 배설하는 것은 1시간 배설 안 하면 못 삽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민의 담보거리가 될 것입니다, 나중에는. 지금 자원순환단지를 민자에서 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물론 우리 대전시에서 약 2,079억 원 자원순환단지 조성 사업의 비용 중 약 460억 원의 음폐수를 빼놓고 나머지 약 1,700억 정도가 자원순환단지 조성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일 GS가, 특정업체를 본 의원이 지명해서 죄송하지만 대기업에서 이익이 없으면 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민자건 재정사업이건 국비는 똑같습니다.

민자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국비가 지원되고 또 만일 광역으로 한다면 금산이나 아니면 저쪽 세종시나 같이 광역으로 한다면 5%, 10%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기업에서 제안한 내용은 우리 대전시에서 재정이 없다, 한 1,000억 정도가 없다고 해서 민자로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대기업에서는 1,000억 정도를 우리 대전시와 MOU를 체결하는 즉시 은행에서 바로 1,000억을 받게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시장님 이외 우리 공직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000억 원을 받아서 1,700억 정도 되는 중에서 약 70%는 집 짓는 것입니다.

나머지 한 500억 이 정도만 기술적인 부분을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안한 대기업에서는 기술력이 없습니다.

우리 시에 기술을 통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하고 MOU를 맺으면 그 사람들은 기술을 공모를 합니다.

또 이분들이 결국은 나중에 우리 대전도시공사와 아마 계약 체결을 해서 도시공사가 여기에 있는 RDF라든가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을 하고 그쪽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GS에서 우리 대전시에서 운영비를 받아서 도시공사에 주게 되는 시스템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재정사업을 왜 못하느냐 하는 굉장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아까 염홍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09년도에 이미 6억 원을 들여서 재정사업으로 결정한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런데 불과 얼마 안 돼서 재정사업에서 민자로 하겠다고 확 바뀌버립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끝나고 시장님께서도 7월에 와 보니까 피맥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것 행정의 연속성이고 그쪽이 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부분인데 결국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은 우리 존경하는 염 시장님이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그래도 도저히 안 되겠다,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시다만 이 부분 재정사업에 대해서 무조건 해야 되겠다, 민자로 해야 되겠다, 재정사업 못 하겠다

하면 방법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학비즈니스벨트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비즈니스벨트를 만든 가장 근본적인 대전시의 요인은 뭐냐?

과학비즈니스벨트의 후광효과를 우리 대전시가 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논란이 많은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왜 IBS가 이쪽으로 옮기느냐는 논란도 결국은 대전시에서 과학비즈니스벨트의 효과들을, 후광효과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학비즈니스벨트에서 대전으로 오기 위해서는 금고동 매립장을 지납니다.

금고동매립장 좌측은 1매립장이요, 우측은 2매립장입니다.

매립장 2개 가운데를 지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2009년도에 민자에서 제안한 내용입니다, 자원순환단지가.

지금 현재 2013년도입니다.

또 행정절차도 지나려고 하면 1, 2년 또 지납니다.

그렇다면 5년 전의 기술 그리고 14개 지자체에서 본 의원이 한 군데라도 성공한 데가 있으면 염홍철 시장님께 ‘제가 잘못 했습니다, 하십시오.’ 이렇게 할 겁니다.

14개 지자체에서 성공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 대전시 이외에 전국에서, 지금 가장 문제는 폐기물 처리하는 문제인데 이 처리하는 문제에서 성공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소송에 걸려 있어요, 이 부분 대기업에서 민자제안한 내용을 민투법에 의해서 제안서를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겨우겨우 보면 GS에서 제안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분들이 제안한 내용에서 25.4%의 함수율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 전체에서 평균 함수율은 한 30%, 40% 됩니다.

가동률이 270일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2대를 놓든지 아니면 1대 반을 놓아야 되는데 1대만 놓게 되어 있어요.

나머지 90일은 일반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가동이 중단된다 그러면 하수슬러지 같은 경우 1일 300톤씩 쌓입니다, 20톤짜리 15대씩 계속 쌓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출을 못 하는 고통 때문에 시민의 편리를 담보로 해서 우리는 그 소송에 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행정의 연속성과 함께, 아까 존경하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민투법에 혹시 문제가 없다면 바꿀 수 있는지, 그렇게 대답을 꼭 해주시고요.

또 이미 말씀하셨던 대로 피택에서 원래는 3개월 이내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6월에 피택에 의뢰를 했습니다, 민투가 좋은가 의뢰를 했습니다.

3개월 이내에 통보를 해주게, 죄송합니다, 60일이니까 2개월이네요.

2개월 이내에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11개월 만에 통보가 왔는데 BC분석이 부적격 판정이 1 이하로 나왔습니다, 지금.

이것이 적절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기술적인 검토를 하지 않으면 우리 대전시민들은 정말 대기업의 편리성 이걸로 불모를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또 아까 대답을 하신 문제 중에서 만일 ‘그래도 할 수 없이 하겠다, 그냥 민투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친환경으로 해야 됩니다.

친환경으로 지하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학비즈니스벨트에서 그런 후광을 얻기 위해서 그분들이 다 대전으로 와야 되는데 양쪽에서 냄새나는 곳 없애야 됩니다.

위에다 짓는 것 지하로 들어가든지 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자원순환단지가 조성되지 않으면 정말 시민들은 대단히 어려움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시장님, 이 부분은 정말 심도 있게 연구해야 되고요.

또 환경녹지국장님도 자주 바뀌고 사실 담당과장님도 6개월에 한 번씩 바뀌는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는 전문가가 와서 아주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이것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진심이고 우리 시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에 대해서 아주 좋은 결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염홍철 시장 《보충답변》

지금 존경하는 한근수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아까 답변에 다 있었어요.

이 논의가 2010년 4월이었다면 제 답변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제가 취임하니까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사업이다, 그래서 그것을 중단하거나 변경하려면 절차나 법의 근거에 의해서밖에 가능하지 못하다.

그래서 정부도 이런 사업에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했잖아요, BC 또는 민자적격성 이런 검토를 하고 또 기획재정부에는 아직도 안 끝난 민간사업투자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부적격 판정이 나오면 변경이 가능한 거지요.

아까 KDI에서 2011년 5월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사업비, 운영비 이런 것은 조정하라 해서 조정을 해서 다시 심의해서 금년 2월

에는 적격한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정부기관에서 판단하는 것을 저희들이 그 결정이 적정하다, 하지 못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만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의회에 이번 질문과 관계없이 저한테 건의를 해주시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취소나 변경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까지 말씀드리면 저도 민간사업보다는 재정사업을 이 경우에는 더 선호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때는 민간제안접수를 받아서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단시킬 수 없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꼭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도 정말 중요한 문제니까 말씀을 해주시면 저도 여러 가지 다른 대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